

[환영논평]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본격화, 행정수도 완성 향한 전환점!

오늘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종은 행정수도를 향해 한 걸음씩 성장해 왔다. 43개 기관, 1만 4천여 명의 공무원이 세종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렸고, 터를 잡은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꿈을 함께 키워왔다. 오늘의 발표는 그동안 시민이 쌓은 노력과 기대의 시간 위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뜻깊은 결정이다.

2027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27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된다. 감사원과 경찰청,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도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차례대로 이전될 계획이다.

지난 9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힌 것에 이어 정부는 오늘 이전 시기와 대상까지 구체화했다. 세종을 국정 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한층 더 강고히 표명된 것이다.

이번 추진은 기관의 공간적 이동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분산된 국정운영기반을 세종시로 결집하겠다는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전환점이다. 아울러

집약을 통해 행정수도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한 행보이기에 더욱 뜻깊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뜻을 모아 후속 절차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요청하는 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도 쉼 없이 전진하겠다. 정부, 세종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와 조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 이주할 공무원과 가족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교육과 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한 노력도 세심하게 이어가겠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도시, 성별,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세종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고른 성장으로 확장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는 시민과 함께,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